

3대종교 토론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일시/장소

2020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

발제/토론

발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토론 지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형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발 제

코로나19 이후의 정세와 요청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불안정해지는 경제상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계속 저성장 상태였고 제조업의 가동률은 떨어져 있었다. 최근의 고용 개선도 노인일자리 확산 등 정부의 불안정한 일자리 확충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서 실업자가 증가하여 60만 명에 도달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19년 만에 신규 취업은 최저이다. 청년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중소 영세 서비스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최근에는 제조업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의 경우 3월 4.4%까지 오른 미국의 실업률이 4월에는 14%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와 증산경쟁으로 인한 유가 폭락으로 불안정해진 가운데, 실물경제의 위기와 금융위기가 함께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유럽과 중국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서 코로나19의 영향이 길어질수록 경제위기의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속에서 대다수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그동안 권리가 없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았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가 필수인데 이 노동자들은 병원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구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야 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다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업무량이 폭증한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다. 건설노동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인 위기 상황 때문에도 노동자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은 급식노동자 해고를 통보했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특별지원업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회사인 한국항공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호텔 등 관광업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 소진, 무급휴직, 권고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방과 후 강사나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 연기로 생계에 위협을 당했다. 요양보호사

등 시간제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은 고용보험에도 들어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라는 이름도 갖지 못한다.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등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별지원을 약속했지만 생계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아예 일이 없어서 생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이 속출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정부의 코로나19로 대응책

정부는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피해기업에게 휴업수당 지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및 생계지원, 돌봄 휴가 지원을 시행한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 대한 현금 지원책을 내놓았고 각 지자체도 재난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거리가 없어진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예술가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각 50만 원씩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 도산과 금융불안 해소 명목으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대출 연장, 이자상환 유예와 신용회복 지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등을 진행하고 세금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의 이슈페이퍼에 의하면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증액 예산 중 기업 관련 예산은 약 1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노동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원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라는 경총

경총은 3월 20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이름으로 40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상속세 인하, 경제인 경제범죄 처벌 완화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혹은 경제 위기는 더 어려운 기업에게 먼저 어려움을 끼치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하거나, 심지어 위기와 관계없는 상속세 완화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악, 사업장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율, 사용자의 각종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산재에서 원청 책임 완화, 파견법 허용업무와 기간 완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들이밀며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코로나19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에 대한 단기대책도 중요하다. 지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문을 닫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으며, 단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당장의 지원은 무조건 중요하다. 재난 생계지원이나 해고 금지, 고용보험의 일시적 확대 등 여러 정책들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삶의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개편하여 누구라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의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고용유지와 기업정보의 공개, 그리고 기업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전제로 한 지원이어야 한다. 이윤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공적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는 다른 세상이어야 한다.

○ 지금까지 함께해주셨던 종교인들께

코로나19의 상황은 단지 잠깐 지나가는 감염병의 유행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에 닥쳐오는 노동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이다.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감염자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었고, 불안정한 노동에 고통을 겪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대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다. 재난은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았다.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들의 고통에 더 많은 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말하고, 드러내야 한다.

동시에 더 길게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제 의료와 돌봄 등 공적 영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요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은 집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시혜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해야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불안정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회나 사찰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도들이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것도 부탁드립니다. <끝>

토 론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역할

- 불교의 입장에서 -

지몽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치료 백신의 개발과 상용화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경제적 여파는 시작단계에 있지만 이미 고용쇼크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 상황에서 순환적 위기로 옮겨 가는 중인 이 시점을 틈타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와 이 기회에 노동 개악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과 고용악화에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전국 규모의 대책기구를 만들고 대응하고자 함은 당연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종교계가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런 경제위기 대책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계가 지금의 경제위기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오늘 토론이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고통이 종식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 불교계의 사회적 대응방안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간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현 코로나19에 대한 불교계의 사회적 대응방안

먼저 초기경전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 되었을 때 구체적 제시되어 있는데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머물 때 밧지족 상업도시 베살리에 전염병이 창궐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베살리의 시민들이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부처님은 비구들과 사흘을 걸어 비사리성에 도착해 <보배경>을 설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베살리 사람들에게 함께 <보배경> 계송을 외우게 했고, 제자들과 함께 발우에 물을 담아 밤새 거리와 환자들에게 뿌렸다. 시신을 치우고 거리를 청정히 하는 일을 7일 동안 계속하자 전염병은 사라지고 베살리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누렸다.

<증일아함경> 중 '보배경'

위의 내용에서 알 수 듯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자비와 이타심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라앉히고 감염의 직접적인 차단을 위해 방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를 간통하는 핵심 사상 중 연기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 집단, 사회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계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역시 나만의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지금 현실이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존재이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나 혼자, 우리 가정, 우리 집단, 우리 사회만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심과 혐오심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과 자비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불교계에서도 자비와 이타의 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단적 차원의 기도회를 비롯해 전국 본. 말사에서 무기한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자리아타의 정신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사회복지센터와 기구, 단체, 본사, 말사 단위로 경제적 기부와 봉사,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등 다양하고 폭넓게 소통과 나눔을 불자님과 취약계층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찰과 참회의 기회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확산 속에서 신도들과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 보고서가 발간되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 주위의 방역이 일상화되도록 직접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경제위기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경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계층에 더욱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필요성

불교계가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문제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적극적 사회 참여나 개입에 대한 논의는 다른 분야의 사회적 역할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 할 것입니다.

-나만 변해서는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올바른 변화가 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만 변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중된 정책만으로는 바람직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고통은 나와 우리만 변화한다고 이 고통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함께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삼법 인중 하나인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제행무상의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 또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그것의 결정권의 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정책에 무관심할 수 없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정책과 한정된 재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권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계의 불자님들이 정부의 정책에 부담감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서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은 나와 남을 위한 자리이타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승보살의 이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교 간의 협력으로

사회적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종교가 있어야 됨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더욱이 탈종교가 가속화되는 요즘 종교 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절망과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종교계가 개별적 신앙을 초월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모은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서 코로나19 인해 미처 이별과 애도의 시간도 없이 떠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기도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코로나19의 타개에서 도약으로

지금의 위기와 다가올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타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층,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모두 치우치지 않는 힘의 균형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재정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계층을 소외시킬 때에는 타개는 쉽지 않고 더 많은 피해로 인해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쟁의 정신으로 서로 소통해 나아갈 때 지금의 위기가 지혜롭게 타개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긍정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 론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역할

- 가톨릭의 입장에서 -

이주형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 들어가는 말 - 코로나19와 종교

“Before Corona, After Corona”(토머스 프리드먼)라는 표현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된다고 한다. 집단감염을 예방하려는 노력과 목적은 거리두기와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를 골자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종교의 외연과 동향을 넘어 그 본질과 기능마저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미 문화, 스포츠, 예술 분야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무관중, 비대면, 무접촉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금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기업 역시 자택 근무,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노동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노동환경과 기업구조는 플랫폼·AI와 결합하여 해체·재편될 것이라 한다. 종교 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금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종교 영역에서 대부분의 기성 종교들은 안전을 이유로 신자들의 경신례 참여 의무를 전면 완화했다. 게다가 이제는 어떠한 종교도 안전이라는 목적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천지예수교 장막교회를 포함하여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교 종단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코로나 사태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사목 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불가피하게도 종교적 영향은 약해질 것이라 분석한다. 집단감염사태가 재발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시 신자와 신도들의 결속력은 약해질 것이고 종교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적 타격이다. 향후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될 시, 지지기반이 약한 소규모 종교, 또는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영세한 교회들 역시 제정구조에 따라 재·개편될 것이며, 대형교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대현 종교는 자선과 공헌, 사목적 이유 등으로 수많은 사업을 수행해왔고 이를 위해 많은 재정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가톨릭 교회 역시 적잖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종교의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그리스도교를 시작으로 종교의 사회적 구조조정이 예측되며 매우 즉각적으로 종교가 향후 어떻게 어떤 모습과 기능으로 재편되어야 하는지 기성 종교인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 쇄신을 시급히 요청한다.

□ 문제제기 - 사회적 가치와 성숙한 사회

하지만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는 안전과 공공성 의료와 보편적 복지, 정부의 적극적

사회제도 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그 공통 함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Public Goods)**이다. 금번 사태는 공익의 최우선 요소가 국민 안전과 의료임을 각인시켜주었고, 전 세계적인 집단감염 사태는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대처가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기에 투명하고 선제적인 정부 주도의 적극적 방역과 개별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결국 울타리 치기, 문 걸어 잠그기, 은폐 등의 폐쇄적인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요청**이다. 앞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표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더 넓고 더 인본(印本)적이면서도 보편적이며 생명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인본적이라 함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야만적 군림과 착취라는 이기적 인간상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타적 인간상**이다(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이런 관점에서 올바른 발전과 인간존엄은 나와 타자를 동시에 배려하고 인간과 함께 자연과 생태를 포함하여 어떤 실재(realities)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집단감염 사태는 울타리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재산과 일자리, 주거환경과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이웃들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들과 노숙자, 이주민과 노인,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분명 금번 팬데믹 사태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과 민낯, 그 속에서 불어져 자라온 불평등을 드러냈다. 또한 금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권의 구태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더욱이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어리석음과 그 무용함을 드러내며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인과 성숙한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가톨릭의 사회론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종교에 대해 논하려면 종교가 갖고 있는 대사회관을 먼저 살펴 봐야 한다. 초세기(the primitive church)부터 가난한 이에 대한 자선을 기조로 실천되었던 가톨릭의 사회론(*The Social teaching of the catholic church*)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를 통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적 연대활동으로 격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산업혁명 이후 종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량의 신앙적·윤리적 불의함이 양산되었고 이는 노동현장에서의 인간소외와 노동자에 대한 착취, 안전과 생명 경시로 이어졌다. 회칙 새로운 사태는 **인간존엄과 정부의 올바른 역할, 사업자의 윤리적 경영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기본권, 인간적 품위 등을 천부적이며 공공적인 보편적·사회적 가치로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사회현장에 대한 복음화를 비롯하여 예언자적 관심과 형제적 연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2004년 간추린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를

공식 발간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시했고, “인간존엄, 공동선과 보조성, 연대와 참여, 재화의 보편적 사용 목적과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환경과 생태의 보호, 모든 이를 위한 경제, 균등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가톨릭의 대사회적 가르침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의 매우 강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 교황 회칙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받으소서’는 이러한 가톨릭의 사회론과 그 안에서 **종교를 초월한 선의를 지닌 이들의 우정 어린 협력, 사회와 깊이 유관된 종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적 평화를 향한 참된 사회적 가치를 심도 있게 조망하며 제시한다. 코로나 사태는 그 자체로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양산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속 구조적 불공평함도 드러내었다. 이는 분명 개선 되어야한다. 만일 제도화된 불의(不義)함과 고착화된 사회적 부조리(不條理)와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크고 작은 폭력은 죽음을 야기한다면, 이는 사회와 개인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하느님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헨리 나웬, ‘평화의 영성’)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인간과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의함을 고발하고 감시하며, 더 나은 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관심을 요청한다.**

□ 나가는 말 : **사회적 가치와 종교의 역할, 평화로써 평화를**

코로나 사태가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까? 하지만 집단감염사태가 모든 일상을 멈추고 헝겊 속에서 삶의 이유, 이웃의 의미, 죽음의 공포를 절실히 성찰하게 했다. 이는 분명 힘든 과정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크게 닥칠 충격과 고통은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합리적이며 사회적, 종교적 가치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선술 했듯 향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교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과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나 사회와 무관한 것도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和而不同, *Ecclesia in mundi sed non mundi*). 기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와 실재(reality) 속에 존재하는 불의함과 어려움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고, 둘째는 평화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가 ‘평화는 정의의 열매’(*Opus iustitiae pax*)임을 언급한 것처럼 가톨릭의 사회론은 삶의 자리, 부조리한 현실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사회와 인간이 겪는 불의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은 모든 진정한 영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껏 이어져온 오늘날 종교의 영적생활은 현실세계와 상당이 분리됐거나, 동떨어져있다. 이는 잘못된 기복신앙과 신앙의 이기주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몰이해와 곡해, 무관심에 사로잡힌 소극성과 열정 없는 침묵, 비난과 불편을 감수하길 원하지 않음 때문이다. 이러한 세태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헨리 나웬, '평화의 영성') 사회와 괴리된 영성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도 괴리되는 것이고, 이는 마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사로잡힌 구태한 정치의 말로처럼 언젠가 종교의 존립마저도 흔들 것이다.

두 번째로 종교의 역할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갈등과 분쟁을 넘어 마음을 한 데 모으고 인간을 인간의 길로 이끄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며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평화가 존재함을 증거 하는 것이 종교의 참된 기능이다. 흔히 이야기한다.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그렇다 분명 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단한 사회적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이는 자칫 투쟁과 폭력만을 야기할 수 있다. 폭력의 악순환은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이 될 수 없다. 투쟁을 향한 개선을 지지하면서 종교는 평화라는 가치를 부여잡는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기에 종교는 현실적 괴리들이 존재함에도 그 속에서 또 다른 화합의 길을 제시한다. 진실로 종교인은 투쟁 속에서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증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인의 삶은 숙고와 결단 속에서 일치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난하고 주변화 된(marginalized) 이들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진정한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격과 언행, 가르침이 통합된 참다운 전인적, 통합된 형태의 영성이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하고 종교 역시 이에 협력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 불의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종교가 종교 본연의 역할과 위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진정한 종교성의 회복은 분명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제언

금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종교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합니다.

종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아야합니다.

종교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예언자적 소명에 충실해야합니다.

종교는 통합적 영성으로서 평화로써 평화를 증거해야합니다.

성직자들은 이러한 실천에 앞장서야 합니다.

토 론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역할

- 개신교의 입장에서 -

최형목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재난의 상황에서 그 위험부담과 고통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가중된다. 이 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 감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혹독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다급한 것은 전반적으로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이겠지만, 바로 그 감염에 대응하는 대책에서, 나아가 향후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대응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추세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인간 삶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재난 기본소득은 단지 자본주의 경제에 기름칠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거둬들임 확인하지만, 우선 당장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약자에게 가중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3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안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취약한 조건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고(기본소득 확대),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해고금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보장, 안전보장, 특수직종의 노동자 권리 보장 등등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확대).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로 예견되는 산업구조 내지는 경제구조의 개편을 전망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는 경제운용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뜻하는 것으로, 이윤을 위한 자본과 과학기술의 결합이 빚어낸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함축한다.

* 교회 등 종교에 부여되는 과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환기시키는 과제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별히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은 시민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치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드러난 ‘신천지’에 대해서도 단지 잘못된 신앙(이른바 ‘이단’)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주목하고, 교회가 짊어진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는 것이 절실하다.